

“헌재, 내란죄 제외 권유했나” “김용현, 국무회의 서명 지시”

(與)

(野)

비상계엄 본회의의 현안질의

민주당 “김용현, 참석자 이름 남겨 국무회의 형식적 요건 갖추려해”
확실한 내란 동조 세력… 조사 바라”
국민의힘, 탄핵심판 내란죄 제외 지적
헌재 “변론절차, 공정 진행 되고 있어”



오동운 공수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헌정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본회의의 현안질의가 9일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따져물었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편향적이라고 비판했다.

헌정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의 현안질의에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에 게 12·3 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의 위헌성에 대해 물었다.

한 의원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포고령 3호,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는 포고령 4호, ‘전공의 등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의 48시간 내 복귀하고 위반시는 처단한다’는 포고령 5호에 대해 물었다. 김 사무처장은 한 의원이 언급한 포고령 모두 “현 상황에서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

품부 장관을 불러 “국무회의에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참석자 이름이라도 써서 남겨주고 말한 국무위원이 있다”며 실명을 밝히라고 했다. 송 장관은 “그분을 기억하지 못한다. 누군가 회의 마지막에 서명을 하고 가라고 했는데, 서명하지 않겠다고 하고 회의장을 나왔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아니었나”라고 묻자 송 장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누군가 국무위원에게 서

명하라고 했다. 저희는 못하겠다고 나왔다고 회상했다.

헌정에 의원은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한다는 헌법 제82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하려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당시 국무회의에 국무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행정안전부의 정관이 회의록을 작성하지도 못했다.

한 의원은 바로 오동운 공수처장을 불러 “계엄 관련 회의에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지난하게 노력한 국무위원이 있다”며 “이 사람은 확실한 내란 동조 세력이다. 해당되는 국무위원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 공수처장은 “잘 알겠다”고 답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과 탄핵 이후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국정안정과 헌법과 사법 절차로 넘어간 계엄 관련 절차를 차분히 진행시키는 것”이라며 “지난 한달을 아까웠다. 저는 국론분열과 갈등이 더 심해졌다고 말씀드린다”고 토로했다.

나 의원은 “유례없는 대행의 대행 탄핵으로 민생경제는 더 불안해졌고 신속을 이유로 졸속이 이뤄지지 않았나”라며 “내란이라는 어마어마한 단어 아래에서 무법, 불법, 위법, 탈법이 판치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듀(Due) 프로세스, 절차적 정당성, 절차 민주주의, 법치주의 완성이라는 그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을 통합하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걸음 더 높아지느냐 아니면 후퇴하느냐의 갈림길”이라고 표현했다.

나 의원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에 대해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청구인 대리인이 (헌재에서) 권유하지도 않았는데 내란죄를 뺐나”라며 “이를 권유한 사실이 있나”라고 김 헌재 사무처장에게 물었다. 김 사무처장은 “변론 준비 절차는 모든 국민이 보는 상태에서 공개된 재판으로, 일체 의혹도 없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권성동, 김상욱에 “당론 따르지 않을 거면 탈당하라”

(국민의힘 원내대표)

(탄핵 찬성파)

김 의원 “당론 아닌 양심 따라 표결 보수의 가치 위해 따르지 못한 것 당내 압력에 소장파 위축된 것 사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8일 본회의장에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사진)에 탈당을 권유한 것이 계속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상욱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강하게 반발하며 2차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대표적인 ‘탄핵 찬성파’다. 김 의원은 국회 본청 건물 앞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으며, 꾸준히 방송에 출연해 비상계엄 선포의 부당성을 설명한 바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김상욱 의원을 찾아가 ‘당론을 따라야

한다. 따르지 않을 거면 탈당하라’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에 올라온 쌍특검법 등 8개 법안에 대한 재의의견을 부결하기로 한 당론을 유지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8일) 본회의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계속해서 당론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에 반대된 행위를 한 김 의원에 대해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우면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과 의총 등에서 개인 의견을 표명하

지 않은 점을 두고 문제 삼았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당론을 따라달라고 김 의원에게 말한 것이 탈당을 권유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사보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좀 더 전문성 있는 의원이 행안위에 들어와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을 피감기관을 둔 행안위에서 ‘찍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지금 민주당과 우리가 중요한 법안을 둘러싸고 표 대결을 하는데, 민주당의 경우는 한 명의 이탈표도 없다”며 “당론은 지도부가 강요하는 특별한 입장이 아니고 당 108명의 의원들이 의총을 거쳐서 결정하는 일

종의 집단지성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서 당론을 결정할 땐 의총을 통해서 모든 의원들이 출석해서 본인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한다”고 부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당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당원이나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주장을 충실히 이야기하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다”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상욱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은 당론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표결하게 돼 있다. 저도 국민의힘의 당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를 기준으로 하려고 애를 많이 쓴다”면서 “그러나 보수당은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 그 가치를 지키는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으면 당론이라도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양심의 울고 그름의 판단 때문에 예외적으로 따

르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총내에서 발언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제 모자람도 있다. 바람이 있다면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니까 당 내 의사결정 과정도 보다 민주적이고 자유로웠으면 한다”면서 “의총 발언에 대해서 물리적 제재는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당내 소장파가 위축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김 의원 본인이 권 원내대표와의 대화를 녹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따녀사냥 하듯이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로 인격적 흠을 낸지는 좀 됐다”며 “제가 녹음할 상황도 아니고 핸드폰을 들고 있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김상욱 의원은 탈당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통 보수주의를 내세우니까 저의 가치와 당의 가치가 같다”면서 “그래서 함께 하고 싶다. 우리 당의 가치를 못 지키면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野, ‘대통령 경호체 폐지’ 법안 발의

尹 체포영장 집행 막으며 ‘논란’ 군사정권 산물 비판도 나와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것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서는 경호처를 폐지하는 법안까지 다수 발의되고 있다. 대다수의 법안을 살펴보면 대통령실 소속인 경호처를 없애고, 대통령의 경호를 경찰청에서 맡는 내용으로 돼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이 경호처 폐지와 관련한 법안을 여러 건 발의했다.

경호처(차관급)는 정부조직법 제16조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과 함께 대통령 직속기구로 규정돼 있다. 1실 3본부(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지원본부) 체제로 구성됐으며 특정직, 일반직을 포함해 750명에 달한다.

경호처의 시작은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49년부터다. 당시 경무대경찰서 담당으로 출발해 제2공화국까지는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담당했다. 경호처가 대통령 직속 체제로 정식 창설된 것은 1963년으로, 당시 명칭은 ‘대통령경호실’이었다. 이후 독립 기관으로 존재하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비서실 산하의 차관급 경호처로 격하된

바 있다.

하지만 경호처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독립기관인 대통령경호실로 승격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 정부 때처럼 경호처 격하는 이뤄졌다. 하지만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로 경찰청 산하 기관으로 보내는 것은 보류된 상태로 현재까지 이어졌다.

이같은 역사 때문에 야권에서는 경호처가 군사정권의 산물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거기에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경호처 인력이 수사관을 막은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경호처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내란 사병을 자처하고 있기에 별도 기구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서예진 기자 syj@

與野, 국정협의회 실무협의 ‘첫발’

최상목, 우원식, 권영세, 이재명 참여

여야가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를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실무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체들이 관심 있어 하는 의제들을 확인했고 이 의제들을 각 내부에서 논의를 거쳐 다시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 설명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김

상훈 정책위의장은 의제 미공개 이유에 대해 “오늘 실무협의회에선 바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양당 대표에게 보고해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해 새로 만나서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은 가능성만 열어놓고 양당 대표에게 보고해 다시 협의를 해서 각 의제별로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부분은 좁히고, 협의회를 할 수 있으면 협의회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실무협의엔 양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강명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태홍 기자